

석사학위논문

# 좌익활동의 회고와 전망

- New Left Review 번역논문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고민정

2003년 12월

# 좌익활동의 회고와 전망

지도교수 김 원 보

고 민 정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고민정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추인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3년 12월

# New Left Review

Min-Jung Ko

(Supervised by Professor Won-B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Dec. 2003

## 목 차

I. 악의 북한	1
II. 체제에 대한 새로운 반항	30
III. 베네수엘라의 붕괴	45
참고문헌	67



## I. 악의 북한

미국은 잔존하는 게릴라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제2의 적국으로 삼고 있지만, 북한은 무자비한 일본의 식민지배에 무력으로 저항하며 1930년대에 건국사상과 국가의 주체성을 마련한 후 미국과의 교전 끝에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은 후 냉전의 반세기를 거치면서 건국사상과 국가의 주체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 북한은 철저한 획일주의와 외국인 혐오 그리고 지도자 숭배사상으로 무장하여 지금까지도 확고한 전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서울에서 북쪽 30마일 정도 떨어진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대략 100만 명의 강력한 상비군을 배치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만 전차 3,000여대, 포 11,000문, 전투기 850대, 전함 430척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전쟁 중 미국이 용단폭격을 가하기 전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한국보다 더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북한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자본재 수입과 투자에 실패하면서 에너지와 화학비료 부문-대부분이 산맥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후자는 식량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공장은 못쓰게 되거나 구식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홍수와 기아로 북한의 사회, 경제적 고통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얼어붙은 강에 봄이 찾아오듯, 무력으로 도발을 벌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변치 않았던 체제에도 변화가 올 수 있는 법이다. 1997년 한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수십 년 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타파할 수 있는 대북 포용 정책인 햇볕정책에 의해 그 동안 봉쇄돼온 북한은 절실하게 필요했

던 자본투자의 돌파구를 모색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북한은 당당하지만 쉽게 신경질적으로 변하면서 항상 자국의 군사적 이점을 협상카드로 삼고 교섭을 시작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남북한은 행복한 기대감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인 협력과 통일을 위한 공동노력을 약속했다.

현대는 DMZ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개성 부근의 경제특구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한국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인 금강산에서 공동관광개발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DMZ 부근 지역에서는 지뢰제거작업이 시작됐고 철로가 보수되었다. 북한은 서부유럽국가와 호주를 비롯한 많은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개발모델과 기술원조를 얻기 위해 외국에 관심을 파견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5월에는 베이징을, 1월에는 상하이를 그리고 8월에는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압록강변의 신의주에서 또 다른 경제특구계획이 시작됐다. 이 계획을 통해서 북한은 국제금융과 무역, 상업, 산업, 진보된 기술, 레저, 관광 부문에서 북한의 유일한 자본주의 지역을 조성할 목표로 미국달러를 통화로 사용하고 입법과 사법, 행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다. 신의주에 거주하는 약 50만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자 했다. 2002년 7월에는 중국식 경제개혁을 채택함으로써 배급제를 폐지하였고 임금과 물가는 18배 상승했으며(농민으로부터의 쌀 구매가격은 400배나 상승했다), 최초의 주택임대료와 실용품 요금제가 도입되었고, 통화 가치는 (순전히 명목상으로) 7분의 1로 떨어져 달러 당 2.20원으로 고정되었다가 암시장거래가격인 150원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등 점점 악화되는 세계경제, 갈수록 치열해지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관계 그리고 이미 이 지역에서 보다 더 노골적으로 주도권을 선언하려하는 새로운 미국 정부 등 9.11 이후 엄중해진 미국의 정책 때문에 2002년 1월 발표된 부시의 연두교서에서 북한은 악의 축으로 규명된 3개국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2002년 9월 미국안보전략문서에서는 이라크와 더불어 불량국가로 지명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부패 관련 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김대중 대통령의 5년간의 임기가 2002년 12월 대선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대선 후보자 중에 한나라당의 보수진영인 이회창 후보는 서슴없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적대적인 힘의 장에서, 북한 지도부는 과거 한반도를 점령했던 일본과 북한의 민간시설물을 파괴했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결론 내린 듯 하다. 북한은 2001년 10월 시험적으로 관리들을 일본에 파견해 교섭을 시도했다. 그 다음해 북한과 일본 외교관들은 30차례 이상 은밀한 외교 교섭을 통해 현안 문제들을 타진했는데 북한측은 1905년에서 1945년까지 40년간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면서 저지른 잔학상에 대한 사과와 보상의 문제를, 일본측은 북한 간첩선이 일본해역에 침입한 문제와 약 12명의 일본인을 납치한 의혹에 대해 논의했다. 2002년 여름이 지나면서, 양측은 많은 부분에 합의했고 고이즈미 일본총리도 9월 17일 방북에 대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 사과의 말로 풍성했던 정상회담

긴장감 속에 회담이 진행되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날 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도시락은 열어보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의 손님은 만나서 식사도 거른 채 단지 이야기만 나눴을 뿐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의례적인 인사조차도 나누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불평등한 사과를 교환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측은 과거 한반도 식민지배를 통해 한민족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가한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 말은 사실 1998년 10월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했던 것으로, 분명 어떠한 법률적 내용이 담겨있지도 않고 다소 형식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관료들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한 후에 당연히 따라나와야 할 보상문제에 대한 요구를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았었고, 보상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확실히 밝히면서 단지 북한과 교섭을 한 것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식민정권이 불법적인 강제행위이며 군사력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오랫동안 제기돼온 주장을 포기하고, 식민정권이 국제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이미 많은 한국인들은 한반도 전체가 기회를 상실한 결과를 낳았으며 안타까워한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나칠 만큼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하더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자행한 여학생과 미용사, 데이트하는 커플 3쌍(외진 해변가에서 납치)과 유럽을 여행하던 학생들을 포함한 일본인 12명의 납치사건을 시인했다. 피랍자들은 북한공작원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지역에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신분을 얻기 위해 북한으로 납치되었다. ‘국가특수기관’의 ‘몇몇 요원들’은 열정과 영광에 대한 갈망 때문에 넘어왔다고 김정일은 덧붙여 말했다. 일본 정부의 소식통은 납치를 자행한 단체는 Room 35-과거 노동당의 해외 정보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집권 노동당의 대외 연락부 산하이지만, 독립된 작전을 펼치는 Section 56은 유럽에서 납치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절대적이며 거스를 수 없는 권한을 지닌 지도자의 국가에서 그 책임은 결국 어디로 돌아갈 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 시인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 한 러시아 평론가는 ‘전체주의국가에서, 사과는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토대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위기감이 고조될 때마다 이러한 모험을 하곤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의 납치사건에 대해서 시인했지만 이제는 또 다른 납치사건에 대한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일본당국은 Room 35와 이 단체의 전임자들이, 1968년 청와대-한국대통령 관저-에 대한 게릴라 공격, 1983년 10월 미얀마 랑군 폭탄공격에 의한 한국대표단 살인사건, 1987년 11월 안다만해 상공에서 대한항공 859기 공중폭파로 인한 115명 사망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결국 이번 시인으로 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내에서 자신의 권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문제와

부딪치게 될 것이다. 당연히 북한 언론은 납치문제와 간첩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단지 북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며, 일본 총리는 북한을 방문하여 60년 전에 저지른 잔학한 행위에 대해 마침내 사과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단한 지력과 책략 덕분에 양국의 관계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을 뿐이다. 그러나 조만간 9·17 정상회담에 대한 다른 의견을 담은 글들도 발행될 것이다. 피랍자들의 신상 조사를 위해 공개적으로 접근하라는 일본인들의 압력으로 이런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다. 지배자의 이미지와 그토록 동일시되었던 한 체제가 반신반인인 ‘친애하는 지도자’에서 범죄를 시인한 어려움에 시달리는 결점 많은 정치인으로 변해버릴 지도자의 체면 손상을 덜고 존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특히 일본인들에 의해 계속해 논의될 것이다.



지금 북한 엘리트들간의 내부갈등을 나타내는 조짐들이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1월 상하이 방문 직전에 이루어진 ‘새로운 사고’와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최초의 발표는 곧 뉴스에 대서 특필되었고, 언론은 전형적인 슬로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2001년 12월 일본과의 교섭이 시작된 지 얼마 후, 완전 무장한 북한 간첩선이 일본해역으로 들어왔다가 일본 해안 경비대에 의해 남중국해에서 침몰되었고 2002년 9월말에 인양되었다. ‘보기 드문 형태의 수중 스쿠터’뿐만 아니라 대공 미사일 2대, 로켓 발사기 2기, 무반동총, 로켓 12대, 고사포, 경기관총 2자루, 자동소총 3자루, 수류탄 6개가 장착되어 있었다고 보도됐다. 9·17 정상회담에서 북한 간첩선에 대해 일본이 항의하자 김정일은 ‘특수부대가 훈련 중이었다. 거기까지 가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지는 상상도 못했다.....특수부대는

과거의 유산이다. 그 일을 매듭짓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17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범죄행위를 시인한 것은 판단착오였다. 아마도 그는 범죄를 시인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양국 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납치 문제가 큰 소란을 야기할 지는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공식적 보상금에 대한 모든 주장을 포기함으로써 그는 약 1.5조 엔 즉 120억 달러-1965년 일본이 한국에 지불한 5억 달러에 상당한 금액으로, 재정적으로 궁핍한 북한에게는 막대한 액수-의 원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구속을 받는 계획과 관련된 형태로만 지불될 것이며, 북한과 마찬가지로 일본 건설업계도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언론이 북한에 대한 대중의 강한 반감을 불지피는 상황-에서 일본 의회의 승낙을 얻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 피랍 일본인, 1977-83

생존

1. **Chimura Yasushi**: 1978년 7월, 23세에 후쿠이(福井)현(縣)에서 납치되었다. 1979년 11월, Hamamoto Fukie와 결혼했다(아래 참조)-자녀 3명, 평양과학학회의 번역가.
2. **Hamamoto Fukie**: 1978년 7월, 후쿠이현에서 납치되었다.

3. **Hasuike Kaoru**: 1978년 7월, 20세에 니가타(新鴻)현 가시와자키(柏崎)에서 납치되었다. 1980년 5월, Okudo Yukiko와 결혼했다(아래 참조)-자녀 2명, 각각 21세와 18세, 평양과학학회의 번역가.
4. **Okudo Yukiko**: 1978년 7월, 22세에 가시와자키에서 납치됐다.
5. **Soga Hitomi**: 1978년 8월 12일, 19세에 간호사로 일했던 사도섬에서 쇼핑하던 중 납치되었다. 1980년 전 미국군인과 결혼했다-자녀 2명, 각각 19세와 17세. (그녀와 함께 사라졌던 어머니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 사망

1. **Arimoto Keiko**, 1998년 11월 4일, 남편과 자녀와 함께 석탄난로로 인한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1983년 10월, 23세에 런던 유학 중, 코펜하겐에서 납치되었다. 1985년 Ishioka Toru와 결혼했다. 1995년 8월 산사태로 실종됐다.
2. **Hara Tadaaki**, 1986년 7월 19일, 간부전(간경변)으로 사망했다. 1980년 6월, 49세에 미야자키(宮崎)현에서 납치되었다. 1984년 10월 Taguchi Yaeko와 결혼했다. 홍수로 인해 실종되었다.
3. **Ichikawa Shuichi**, 1979년 9월 4일, 원산에서 익사하여 숨졌다(심부전). 1978년 8월, 23세에 가고시마현에서 납치되었다. 1979년 4월 20일, Matsumoto Rumiko와 결혼했다(아래 참조). 1995년 7월, 홍수와 댐 폭파로 실종됐다.
4. **Ishioka Toru**, 1988년 11월 4일, 사망했다. 1980년 6월 7일, 22세에 스페인에서 납치되었다. 1985년 12월, Arimoto Keiko와 결혼했다.
5. **Matsuki Kaoru**, 1996년 8월 23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980년

6월 7일, 스페인에서 납치되었다. 홍수로 인해 실종되었다가 시신이 발견되어 화장 후 2002년 8월 30일에 공동묘지에 안치됐다.

6. **Masumoto Rumiko**, 1981년 8월 17일,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1978년 8월, 24세에 가고시마현에서 납치되었다. 1979년 4월 20일, Ichikawa Shuichi와 결혼했다. 1995년 7월, 홍수로 인해 실종됐다.

7. **Taguchi Yaeko**, 1986년 7월 30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978년 6월, 22세에 납치되었다. 1984년 10월 Hara Tadaaki와 결혼했다. 홍수로 인해 실종됐다. [김현희의 교사, 이은혜로도 알려짐]

8. **Yokota Megumi**, 1993년 3월 13일, 자살했다. 1977년 11월 15일, 13세에 니가타(新潟)에서 납치되었다. 1986년 김철주와 결혼했다 -딸 김혜경은 1987년 9월 14일 태어났다. [류명숙으로도 알려짐]



다양한 매체의 소식통에서 얻은 정보를 편집했다. 북한은 7명을 납치했다고 시인했지만, 5명은 자신의 자유의사로 북한으로 건너갔고 1명은 일본 중개자의 도움으로 납치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납치를 자행한 사람은 장평림과 김성철로서 1998년 재판에 회부되어, 각각 사형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생존자 5명은 9월말, 일본 조사단에게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밝혔다.

## 일본의 반발

북한과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도-국제적으로도-그 무엇보다도 납치사건의 한 단면에만 거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대변인들에 의하면, 고이즈미 총리는 ‘수치스러운’ 국가에게 범죄행위를 시인하라고 강요했다. 일본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느냐

는 문제는 거의 제기되지 않았고, 사과하기는 했지만, 57년이 지나서야 사과하게 된 것도 일본이 완고하거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완고하고 비합리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여겼다. 일본의 한 논평자는 일본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웃 국가에 침입하여 식민지로 삼고는 사람들의 토지와 이름, 언어, 동네 마을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다루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죽이고, 젊은 남자들을 납치해 전쟁터에 제국주의 국가의 군대를 위한 일꾼과 병사로 보냈다. 여성은 위안부로 보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나서 57년 동안,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하지도 않았다.

유명한 재일 동포 소설가인 김석범은 납치사건과 보상요구를 포기한 ‘불충하고 치욕적인’ 행위에 대해서 북한을, ‘역사에 대한 건망증’에 대해서 일본을 비난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의 소리는 한꺼번에 터져 나온 일본인의 고통과 독선적인 분노에 묻혔다. 9·17 정상회담에 대한 발표는 미국의 9·11 이후와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격한 감정, 이를테면 피랍자 가족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분개, 북한에 대한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일본정부, 특히 외무성의 우유부단함과 무능력, 은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일본이 북한에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야 했다는 확신 등에 의해 여론은 동요되었다.

2002년 9월 말, 납치 생존자 5명은 일본 조사단에게 자신들은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 세뇌로 인해 그런 말을 한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일본이 강력한 요구를 한 후에 자녀 6명을 제외한 피랍자들은 10월 15일 일본으로 송환됐다. 그들은 일본 언론에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고 이 사실은 이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짧은 방문을 끝내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이 일본에 머물러있어야 한다는 격렬한 운동이 거세게 벌어졌다. 10월 24일, 후쿠다 야수오 관방 장관은 2주 후에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불쌍한 피랍자 5명을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고 발표했다. Japan Times가 밝혔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 의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일본에 영구히 거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아사히신문의 지적대로 일본당국은 원래 일본태생인 피랍자들은 물론이고 부모가 일본인이라는 사실 혹은 납치되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북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랍자의 자녀들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했다.

2002년 10월 말, 칼라룸푸르에서 일본과 북한 대표자 회의에서, 일본측의 피랍자 자녀들의 ‘귀국’, 즉 인도에 대한 요구가 주된 논점이었다. 일본 입장에서는 피랍자 자녀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일본인’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일본에서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우선 피랍자 5명을 길어야 2주 동안 일본에 보냈고 그들의 자녀들은 절대로 ‘인도’ (혹은 일본측에서 의미하는 강제로 데려가기) 될 수 없다는 약속을 일본이 이미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피

랍자 가족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곳을 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집에서 재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그것은 분명 옳은 것이었다.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적절히 입증하지 못했지만 피랍자 5명이 일본에 영구히 거주해야 한다고 결정한 일본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거주에 대한 선택과 이전할 자유를 갖고 있다...외국으로 건너가 일본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신성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헌법 2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성의를 보이라는 충고를 받은 것도, ‘일본과 북한은 인간의 삶에 다른 가치를 두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바로 북한 대표자들이었다. 9월 17일 이후 겨우 한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본의 사과는 이미 잊혀진 듯 했다.

아마도 가장 마음 아픈 사연은 15세 김혜경의 이야기이다. 김 양의 어머니 요코타 메구미는 13세 되던 해인 1977년에 배드민턴 경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납치되어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1986년에 김철주라는 북한 남자와 결혼했으며 1년 뒤 딸을 낳았다. 북한에 따르면 요코타는 우울증에 걸려서 딸이 5살이 되던 1993년에 자살했다는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로도 이런 상황 즉 요코타의 부모가 그 납치 때문에 생활이 엉망이 돼버린 북한에서 줄곧 자란 손녀딸의 귀국을 요구하고, 손녀딸의 북한 아버지로부터 자녀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일본에서는 어린 손녀딸이 북한 집을 떠나서 조부모를 ‘만나기’ 위해 일본에 오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TV인터뷰에서 손녀딸은 조부모들이 자기를 만나러 북한에 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왜 이제는 만나러 오라고만 하는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녀의



조부모는 디즈니랜드에 데리고 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일본 정부 성명서에서 김 양뿐만이 아니라 만약 떠나게 된다면 귀환자 5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편도여행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귀환하는 이들의 권리와 희망은 이론적으로나마 존중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분노한 일본 여론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들의 비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극적인 9월 정상회담 이후 몇 주 동안 북한은 피랍자들의 신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사망한 피랍자 8명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두 명은 불량 석탄난로의 가스에 의해 숨졌고, 또 다른 두 명은 (교통량이 적은 국가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리고 심부전으로 두 명(한 명은 수영하다가)이 사망했고 간경변으로 1명, 자살로 1명이 각각 사망했다. 더구나 나머지 두 명은 홍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일본에서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하고 믿을 수 없다며 북한의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필요하다면 '강제적으로(*muriyari ni*)', 생존자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소식통에 따르면 사망한 이들은 한국어로는 전향, 일본어로는 텐꼬라고 불리는 일-주체사상 즉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맹세-을 하지 않을 경우 산 속 노동훈련캠프로 보내졌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북한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했다. 일본 경찰은 처음 예상했던 수-약 40명-보다도 더 많은 피랍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따르면 1953년 이후 납치된 사람들 중에 400명 이상의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유럽인, 아랍인, 중국인-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납치는 특이한 사건이다. 무엇보다 납치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다른 경우에 있어서 피랍자들은 북한 체제에 굉장히 잘 적응한 듯 하다. 2002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간 일본인 5명은 북한에서 20년 이상 살았는데, 외견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충성스런 북한 추종자들과 마찬가지로 행동했다. 아마도 가장 특이한 사례는 한국의 영화 감독 신상옥과 여배우인 최은희의 경우이다. 그 부부는 1978년에 납치되어 북한 스튜디오에서 함께 영화를 제작하다가 결국 1986년 도주하는데 성공했다. 부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에 직접 관여했으며 북한 영화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들을 납치했다고 말했다. 2001년 11월 신 감독은 한국에서 부산 국제 영화제의 심사위원이 되었다. 한국과 북한, 할리우드에서의 경력을 돌아보면서 신 감독은 “도주”-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해 만든 영화 가운데 하나-라는 영화가 자신의 걸작이라고 말했다. 이상하게도 한국 대법관의 명령으로 “도주”는 상영이 금지되었다.

## 테러의 역사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북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주민들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체로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대략 20만 명-2300만 인구의 1%-의 주민들은 노동훈련캠프에 수용되었다고 여겨진다. 100만 명에서 200만 명-5~10%-은 굶어 죽었으며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도주했다. 북한의 테러와 동원, 격리가 독특하게 결합된 북한의 체제는 냉전이 끝난 후에 그 응집력이 서서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의 절대적 권위와 결합되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상황을 통해 볼 때, 이런 사실에 대한 북한의 전과(기록)는 일본과 초강대국-특히 미국-이 한민족에게 가한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 미국이 테러 국가라고 지명하는 행위는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습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100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는 '정상적인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인 테러 사건들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보면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고 존경받는 국가적인 영웅은 1909년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안중근 의사이다. 일본에서도 다른 세계에서든 분명 안중근 의사는 단지 테러범일 뿐이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1930년대와 1940년대 천황의 이름과 축복 하에 아시아를 황폐케 한 일본 테러범들-누구보다도 일본 폭탄 자살범의 선조인 가미가제 특공대-의 위패를 모시는 신사를 항상 참배하고 있다. 테러가 한창일 때, 제국주의 일본은 수십만 명의 젊은 한국 남자를 강제 노동과 군복무를 위해 납치했고, 여성은 강제 매춘을 위해 납치했다. 일본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이제야 겨우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45년 이후, 제국주의 일본의 테러 행위가 끝나자마자 곧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남부 절반에 들어오고 소련은 북부 절반에 들어오면서 외국의 점령과 사실상의 분할이 시작되었다. 1950~53년 한국전쟁은 외부세력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일어난 내란으로 시작되었다. 국제적인 개입-가장 먼저 미국, 그 다음은 중국-이 큰 재앙이 되었다. 이 기간에는 가장 잔인한 테러와 대량학살을 자행한 유일한 비인간적 정권으로서의 북한의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비록 북한의 행위에는 비난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 중 가장 잔학한 것은 먼저 노근리와 대전 등지에서 한국이 저지른 행위이다. 그 다음이 미국이 저지른 행위인데, 미국은 계획적으로 북부지역의 댐과 발전소, 사회기반시설물들을 파괴했으며 이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의 군사 전략은 마음대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1948년에 수립된 한국 정부에서는 전쟁에서의 무력 사태만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1987년 민주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국가 기관에 의한 살인과 고문, 납치가 여전히 흔한 일이었다. 1967년과 1969년 사이에, 유럽이나 북한에서 공부하거나 거주하는 학생, 예술가, 지식인 등 백여 명이 한국으로 끌려왔다. 간첩 혐의를 받거나, 고문을 받고,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며, 많은 경우에 사형선고나 무기징역의 형을 받기도 했다. 20세기 한국과 독일에서 가장 훌륭한 작곡가 윤이상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결국 사형선고를 받은 그는 감형되었지만 고문으로 완치될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고 1995년에 사망했다. 옥스퍼드 학생이던 박노수(프랑스 공원) 등 다른 이들도 단숨에 처형되었다. 현재 한국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은 도쿄의 한 호텔 방에서 한국 CIA요원들에게 납치되었다. 그도 또한 간신히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두 정부에 의해서 조용히 묻혔고, 적절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없었다. 한국 군사 정권의 국가적 테러 행위는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받았고, 수천 명은 아니더라도 수백 명이 광주학살사건에서 살해되었던 1980년에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테러 정권을 종식시켰던 것은 바로 노동자와 학생들이 주도한 대중 운동의 성공이었

던 것을 상기해 볼 만하다. 그 때처럼 지금도 북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외부세력이 아닌 한국인이다.

## 핵 하늘 아래서 살기

북한에는 카드로 쓸만한 것이 거의 없다. 핵은 적어도 10년간 조커의 구실을 했다. 북한은 핵 공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반세기 이상 그 공포를 받는 쪽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950년 겨울, 맥아더 장군은 30~40개 핵 폭탄 투하에 대한 허가권을 요구했고 대한해협을 따라 방사성 코발트를 배치했다. 한국전쟁 중 합동참모 본부는 원자폭탄 사용에 대해 심사숙고했고 몇 차례나 사용할 뻔했다. 1951년 말, 허드슨 하버 작전에서 단 하나의 B52폭탄이 마치 핵 폭탄이 투하되듯이, 공포를 일으키기 위해-사실 공포를 일으켰지만-북한에 투하되었다. 1957년부터 미국은 핵이 없는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서 DMZ 부근에 핵무기를 비축해 두었지만, 1991년에야 비로소 한국인들의 평화 운동에 의해서 철거되었고 미국은 1998년까지 아마도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핵 폭탄 공격 훈련을 계속했다. 북한은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다른 국가보다도 더 오랫동안 핵에 의한 궤멸 위협을 받으며 존속해 왔기에 그런 위협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북한은 세계에 핵에 관한 위선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핵국들은 핵 폭탄 독점에 분노하면서도 핵 폭탄을 보유한 강대국의 특권을 약속한다. 비핵국들은 ‘핵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현재의 핵 클럽 회원국의 존중을 받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외부세

계에 전멸의 위협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자신은 핵실험금지조약 비준을 거부하며 우주공간을 무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9,000여 개의 창고 외에도, 걸프 전쟁과 발칸반도 전쟁 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열화우라늄을 배치했다. 미 의회는 지하 군사 단지와 병커에 대비하여 사용할 ‘강력한 핵 지표 관통 무기’의 생산을 인준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1993년 미 정보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핵 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전쟁 위협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5027 작전 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면전이 발생하면 미국인 80,000~100,000명을 포함해 무려 백만 명이나 죽게 될 것이고, 미국은 현금만 천 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될 것이며, 소유지의 파괴와 경제 활동의 중단으로 1조 달러 이상이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강력히 추진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교섭을 해야만 했다. 카터 대통령은 1994년 북한을 방문하여 ‘제네바 합의’라고 알려진 협상을 맺었다. 이 협상으로 인해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후원으로, 북한은 2003년까지 완공될 경수로 2기와 해마다 330만 배럴의 석유가 지원되는 대가로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고,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 사건에 대한 주요한 연구 결과, 북한은 핵 카드를 ‘훌륭하게’ 구사함으로써 가장 부유한 강대국이 어쩔 수

없이 교섭에 응하여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에게 양보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은 처음부터 마지못해 제네바 기본합의를 맺었다. 그래서 미국은 경수로가 완공되기 전에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한 듯했다. ‘2003년’ 완공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건설 공사가 지연되었고 2002년이 되어서야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이 지나서야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양국관계의 ‘완전 정상화’-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협상-를 위한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더디게 진행되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오른손인 조명록 총사령관과 매딜레인 알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진 클린턴 대통령 집권 당시에만 잠깐 속도를 냈을 뿐이었다.



1998년부터 미 정보 요원들은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시켰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으로 보인다. 미 정보 요원들이 농축 과정에서 대기로 유출되어 인공위성이나 비행기의 적외선 탐지기로 관찰할 수 있는 대량의 열의 징후를 감지했거나, 아니면 특수 장비를 (아마도 파키스탄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포착되었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그 사실을 알아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라늄 농축은 제네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우라늄을 어느 단계까지 농축시켰는지도 확실치 않다. 단지 고농축 우라늄만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보다 낮은 단계로 농축된 우라늄은 원자로에서-북한이 1990년대 초 건설한 원자로에서는 아니지만-사용된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바로 전인 2002년 9월 12일, 미국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나 북일 양측은 평양선언문에서 핵 문제에 대한 ‘모든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일종의 확신을 보여주었지만,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고이즈미는 그 문제에 대해 그다지 단호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것처럼 보였다. 10월 3일 미 대통령 특사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을 방문해 ‘핵 문제를 더욱 강도 높게 다뤘다’. 북한이 그런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핵 문제는 제네바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던 것이다. 제임스 켈리는 북한이 ‘WMD(대량살상무기) 계획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수출, 이웃국가에 대한 위협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행동 변화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을 거부하는 대신에 강성주 외무성 제1부상은-제임스 켈리의 말에 의하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훨씬 더 강력한’ ‘다른 무기들’의 존재를 시인했다.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 외교부의 최고 실력가이자 1994년 회담의 중심인물이었던 강성주 외무성 제1부상은 정확히 무엇을, 어떤 의도로 시인했던 것일까? 조선중앙통신은 공동 성명에서 ‘미 대통령 특사에게 북한은 자국의 주권을 지키고 점점 커지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어떠한 무기도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을 뿐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UN에 우라늄 농축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동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계획에 해당되는지는 논의할 여지가 있으나, 북한은 분명 무기 개발에 필요한 그 어떤 실험도 하지 않았



다. 북한은 원자로의 ‘상당 부분’이 완공되고 ‘중요한 핵 성분’이 산출됐을 때에만 오직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할 의무가 있었다. 오랫동안 KEDO현장에 어떤 진전도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원자로 건설과 같은 약속의 이행이 지연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말을 미국이 ‘오해’했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고위 자문위원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북 이후, 또 남북경제협력의 힘을 얻고 있는 시기에 미국이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10월 16일 신 맥코맥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북미 제네바 합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앞으로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이 다 함께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단호하게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에 대하여 세세한 점까지 통제하는 지역적 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 구실을 얻었다. 2002년 11월 14일, KEDO이사국은 중유공급을 12월 선적분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통일부는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대해 “북한의 실질적인 목표는 핵 개발 계획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그럴듯한 분석일 것이다. 알렉산더 맨소로브 박사는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이르면 1990년대 초부터, 제네바 합의의 파기 가능성에 대한 대안으로 은밀한 핵 R&D 계획을 추진해왔다...한편에서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임스 켈리의 협박에 대해 핵 위협을 위장하여 대응하

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포괄적인 약속을 제안했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동은 '비합리적인 극단정책'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위압적인 외교술이었다. 북한은 핵 개발 계획이 미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서, 이를 바탕으로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했다고 말할 수 있다.

### ‘동아시아의 영국’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직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2001년 초 취임했을 당시만큼 상승했는데, 이는 관계 정상화에 대한 그의 추진력에 대해 강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은 피랍자들의 고통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에서는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모욕과 괴롭힘을 당하거나 지하철이나 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칼로 베이는 기이한 폭력사태가 또다시 일어났다. 고위 공무원들은 보복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조총련의 기관에서는 경비를 서야했으며 살인 협박도 있었다고 한다. 양국관계에 대한 정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9월 19일자 아사히신문은 ‘이런 불법적인 국가와 과연 수교를 맺어야만 하는가?’라는 기사를 실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지도 아래 고이즈미 총리를 대신해 주요정당을 해체하고 개편하여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려는 긴박한 조치도 고려되고 있었다. 그는 최근 뉴스위크에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전포고라고 논평했다. 이에 앞서, 그는 널리 알려진

보도문에서 난징 대학살을 부인하면서, 자위대에 한족과 조선인을 처부술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고, 헌법을 미국의 강요라고 거부했으며, 의회 위원회에 백인의 통치로부터 아시아인의 해방을 위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가임이 분명하며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에게 중요한 안건은 무엇보다도 과거 식민지 국가로부터 억지로 사과를 받아냄으로써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의 지지율을 낮추는 일이었다. 9월 17일 이후, 이시하라 도지사는 잠시 뒷전으로 물러나 있지만, 분명 이것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일본 자유민주당내의 어느 파벌이 북일 관계 정상화와 뒤이은 원조 및 개발 계획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불경기에 휘청거리는 일본 건설업계에서 여러 제휴사에 도움이 될, 도로와 다리, 댐, 발전소, 철도, 북한의 다른 기반시설들을 건설할 수 있는 수지가 맞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또한 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던 1960년대에도, 일본은 집권파벌의 교섭으로 막대한 자금의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이와 비슷하게 일본 건설업계의 탄탄한 기업들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게 북한은 시민사회의 항의가 전혀 없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미개척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개방으로 일본은 미국이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 국방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계속해서 미국 보호에 의존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중

일 협정으로 미국 보호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북일 관계와 남북한 관계에서 긴장감이 완화된다면, 일본의-특히 오키나와-미군기지의 목적과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 계획내의 일본의 포괄적인 협력은 불투명해진다.

## 일본의 독립?

현대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점령 하에 굳혀진 (일본 엘리트들의 지지를 얻은) 의존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일본의 민족주의는 국가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상징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과 (미국에의) 군사적, 정치적인 면에서의 확고한 예측상태가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매관’ 혹은 ‘기생충’이라 할 수 있는 왜곡된 신민족주의 형태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일본이 자립하여 국가, 지역, 세계의 이익을 미국의 이익보다 우선할 때 해결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전직 일본 고위관리들도 최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 일본 UN대사이자 OECD 사무 부총장이던 다니구치 마고토는 일본 외무성의 ‘미국 사고방식 따라하기’를 광범위하게 재고해야 하며, 아시아 중심적인 다각적 외교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짝사랑’이란 말로 표현한다. 다게오카 카슈미 전 방위청 장관은 동아시아에는 일본을 침략할 수 있는 세력이 없으며, 9·11에 대해 미국이 추구하는 방식은 ‘순전히 군사적인 광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키야마 마사히로 전 일본

방위청 사무차관은 일본이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쓴 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토 잇초 나가사키 시장은 나가사키 원폭투하 기념일에, 2002년 8월 발표한 연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미국의 행동을 보면 섬뜩해진다고 말했다. 히로시마 시장도 ‘미 정부가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를 강요할 권한이나, 일방적으로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테라시마 지추로 미쓰이 국제 문제 연구소장도 민간인의 견해를 살펴보면, 우선 세상을 미국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50년간 뿌리 박힌 일본의 현대 문제점으로 생각한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하에 일본은 커다란 혼돈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제 일본은 자율적인 외교정책을 개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일본 국토에 외국군이 주둔하지 못하도록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일본과 미국의 여론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2002년 9월 이라크 전쟁에 대해 찬성하는 일본인은 단지 14%였고 반대하는 측이 77%였다. 미국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57%였으며 반대하는 사람은 32%였다. 일본인의 50%가 미국이 세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일본인 23%만이 미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여론은 일본 국내의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상당부분이 좌우된다. 다수의 좌파 성향의 진보주의 평론가들은 북한에 대한 개방정책에 찬성하는 반면에, 북한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갖고 모든 한민족을 마음속으로 경멸하는 우파 성향의 신민족주의자들은 ‘그것 봐라.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 9월 17일 이후,

2002년 여름에는 묵살되었던 일본 정부의 ‘비상조치’ 법안이 실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일본군의 역할과 핵 문제 재개에 대한 헌법 개정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한 NATO식 파트너인 ‘극동의 영국’으로서 연합작전을 지지해줄, 일본의 방위영역 확대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실제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9월 17일 이루어진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이 반세기 동안의 긴밀한 미·일 외교정책 협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 미·일간 그러한 불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일본인들이 120여 년 뒤에는, 대륙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동아시아의 영국보다는 ‘일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 하다. 하지만 그런 시각에는 과거 ‘위대한 일본’의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냉전 이후의 자국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일본의 안건은 미국과 일치하지 않지만, 미국의 압력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다. 노로타 호세이 방위청 장관은 1999년 3월, 어떤 상황에서는 일본의 자위대의 권한에 선제공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북한과 관련해서 이러한 그의 주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몇 년간, 일본 핵무기 무장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정치계에 힘을 실어주었다. 니시무라 신고 방위청 정무차관은 1999년 10월, 일본 핵 무장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2002년에는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과 아베 신조 관방 부장관이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검토해야 할

때이며, 핵무기보유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02년 6월에는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대표가 ‘일본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면, 핵무기 사용을 요구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므로’, 중국은 일본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모두 실행될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이다. 그러나 9월 17일 발표로 인한 분노와 공포, 좌절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 일본의 진로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9월경에는 일본인에게 하찮은 관심사였던 핵 문제가 정상회담 직전에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자율적인 일본 외교정책을 펴보자는 일본의 움직임은 사라졌고,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의 ‘동맹 파트너’와 정확히 보조를 맞췄다.

## 남북한의 상호관계

9·17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물론 아주 달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지나친 사과를 유보했어야 했다며 분노했었는데 한국인의 불만이 더욱 더 컸다. 김대중 대통령은 가족의 부정부패 혐의로 지지율이 이미 밑바닥에 이르렀는데, 훨씬 더 하락했다. 그의 햇볕정책은 아주 많은 희망을 주었는데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제임스 켈리의 핵 발언에 대해 전보다 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에 따라 미국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한국은 여러 전선에서 북한과의 교섭을 시도했는데, 미국의 발언으로 한국은 장애물과 마주하게 되었다. 전 외교부 관리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해석-‘외교적으로 제멋대로 하며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부도덕하다’-은 한국에 널리 퍼진 정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일본과 미국은 납치문제와 우라늄 농축문제에 대해서 각각 분노를 표출했지만, 한국의 반응은 보다 침착한 것이었고 무력 사용과 제재 조치는 논의될 대상이 아니고 대화만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은 2002년 10월 29일 칼라룸푸르 회담에서 북한에 전달됐을 최후통첩을 되풀이했지만, 남북한 교류는 예전처럼 계속되었다. 북한 국가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형인 조선노동당의 핵심인물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은 10월 26일 한국에 도착해서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 제철 공장을 9일간의 일정으로 돌아보았다. 한국은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더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과거 한국의 군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언론에 있는 대변자들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력한 일간지 ‘조선일보’에서 매달 발행하는 보수성향의 ‘조선월간’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최소한 6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대학살은 수많은 러시아인을 숙청한 스탈린과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폴 포트’의 대학살에 버금가는 악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은 분명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는 차기정부에서도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모든 정부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들이 커다란 재앙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기조차 힘들다. 무력에 의존하는 것은 1994년 미국을 움찔하게 했던 규모의 사상자를 낼 것인데, 이 점 때문에 당시 한국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행동을 거부했다.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은 한국에 사회적, 경제적 악몽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국경선



에는 2천 2백만 명이 굶어 죽게 될 것이고, 수십만에 달하는 군대가 통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최고 3조 2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충격적인 통일 비용 때문에 한국 경제는 불황에 허우적거리고, 동북아시아의 모든 지역이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식민지배와 점령, 전쟁, 강제 분할 체제 때문에 한반도 전역이 고통과 상처를 받아왔고, ‘정상적인’ 국가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독특한 언어와 문화적인 전통을 지닌 한국의 왕조는 기원 후 668년에 통일되었다-은 여전히 쓰라린 좌절을 겪고 있다. 신기하게도, 남북한은 분단되었지만 지난 50년간 구조적으로 특수한 유사성을 공유해왔다. 백낙청씨가 지적한 대로, 남북한은 ‘수직적으로 강하지만’(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수평적으로 약한’(다른 세력의 외압으로부터) 형세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 이를테면 김정일의 제1주체사상은 언제나 신념으로 여겨졌고, 북한은 소련의 원조에 지나치게 의존했었다. 또한 남북한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무자비한 군사독재정권을 수십 년간 지지했던 제국주의 미국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왔다. 이 두 세력에 게서-또는 중국으로부터- 자국의 이익만을 무자비하게 추구하는 것 외에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몹시 궁핍하면서도 매우 자존심이 강한 국가인 북한과 교섭하는 일은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이다. 오늘날 그 어떤 국가나 민족도 교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외의 모든 것은 포기할 수는 있지만 두 가지 심리적인 요소인 자존심과 체면이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왜곡될 수 있지만, 이런 감정을 야기하는 고통과 정의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북한의 성공적인 민주화와 경

체적인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반도 즉 남북한의 미래는 한민족 스스로가 가장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다.

## II. 체제에 대한 새로운 반항

나는 역사적, 분석학적으로 볼 때, 여러 면에서 서로 상대적이며 독특한 두 가지 형태로 행해졌던 민중 운동-‘사회적’ 그리고 ‘민족적’이란 명분 아래 행해진 운동들-을 통합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1970년대 ‘반체제 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운동은 주로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으로 여겨졌다. 이들은 국가 내에서 자본가나 고용주에 대한 계급 투쟁을 더욱 확대시키려고 했다. 민족주의 운동은 이탈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일부라고 여겨지는 별개의 정치 단체들을 통합하거나,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식민지-를 제국주의적이며 압제적인 국가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민족 국가를 탄생시키려는 운동을 가리킨다.

두 형태의 운동은 19세기 후반 중요한 관료 체제로 그 모습을 드러내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강력한 체제로 발전되었다. 두 운동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보다, 특히 국가나 사회의 경쟁자의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목적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로 인해, 지나치게 상대를 위협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했다. 두 운동이 정치적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설령 있다하더라도 근본적

인 동맹이기보다는 일시적인 전술로서 협력하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0년과 1970년 사이의 두 운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서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부분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운동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회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혁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사실 두 운동은 때때로 별개의 조직 내에 자리하면서 보통보다 점진적인 접근을 주장하면서 혁명이란 말을 삼가는 정치 성향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처음으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 운동들, 심지어는 이보다 훨씬 온건한 운동들마저 자신들의 안정을 위협하거나, 혹은 그들의 정치 체계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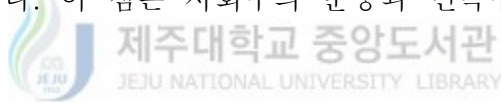


▶ 둘째, 두 운동은 초기에 정치적으로 아주 미약한 존재여서 단지 존속하기 위해서도 힘든 싸움을 해야만 했다. 정부는 이 운동을 진압하고 금지했는데,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체포되었고 운동참가들 또한 국가나 민간 세력으로부터 체계적으로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초창기 행해졌던 많은 운동 방식은 모두가 사라져 버렸다.

▶ 셋째, 19세기 마지막 30년 동안 두 운동은, 어떤 전략을 두고 일련의 엄청난 논쟁을 벌이는데, 그 전략에는 국가를 본질적인 적으로 간주하여, 대신에 개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국가 지향적’ 시각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다. 사회주의 운동으로 보면 마르크스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간의 논

쟁이었으며, 민족주의 운동으로 보면 정치 민족주의자와 문화 민족주의자간의 논쟁이었다.

▶ 역사적으로 이러한 논쟁에서 발생했던 현상인데, 두 운동의 네 번째 공통점으로서, ‘국가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점이다.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결정적인 논점은 실질적인 권력의 직접적인 원천은 국가기관에 있었고, 국가는 무정부주의나 문화 민족주의의 팽창 노력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의 구심성을 억압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는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19세기 말경, 이 단체들은 소위 두 단계 전략을 발표했다. 1단계는 국가 체제 내에서의 권력 획득이고 그 다음 단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점은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에 모두 적용된다.



▶ 다섯 번째 공통점은 앞의 공통점들에 비해서 뚜렷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자신의 노선을 전개할 때 때때로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띠었고,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에는 종종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 결과, 과거 지지자들이 여태까지 인정했던 것보다 두 가지 주장은 더욱 더 불분명하게 되었다.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통합의 힘으로서 보수주의자들이나 국가에 비해서 더 효율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자주 받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동원 과정에서 두 단체는 자신의 진영에 점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끌어들이야 했고, 이런 점에서 자신의 수사를 펼 때 관심 영역을 넓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둘째, 두 운동의 지도자

들은 현존하는 체제 안에 공동의 적이 있다는 점을 종종 무심결에 인정했으며 그리고 서로 공공연히 밝힌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 두 운동의 민중 동원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아주 비슷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몇 안 되는 지성인과 다른 계층에 속한 소수의 투사로 구성된 작은 단체로 시작했다. 성공했던 운동도 그랬는데, 장기적인 교육 캠페인과 조직의 힘으로 투사와 동조자, 수동적인 지지자를 포함한 동심원적 구조 안에 민중 토대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오쩌둥의 표현으로 물에서 수영하는 물고기처럼, 투사들이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세력이 확장하면서 운동은 점차 정치적인 세력을 옹호하는 진정한 투쟁 단체로 바뀌었다. 당연히 자신들이 ‘사회 민주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은 세계 경제의 중심 지역에 자리잡은 국가에서 세력을 얻은 반면, 민족 해방주의 운동이라 주장하는 단체들은 중심 지역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 그 세력을 떨쳤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유의해야만 한다. 또한 후자는 공산주의 정당에 해당된다. 이유는 분명하다. 세력이 약한 지역의 사람들은 제국주의 세력이 직접·간접적으로 통치를 하든 말든 간에, 평등을 위한 투쟁이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가 체계에 대한 통치권을 쟁취하는 그들의 능력에 달려왔다고 생각했다. 중심 지역의 사람들은 이미 강력한 국가 안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평등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배 계층으로부터 세력을 쟁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강력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반란은 받아들이기 힘든 전술이어서 정당은 선거라는 수단을 이용하였다.

▶ 일곱 번째 공통점으로, 두 운동은 주된 변화 양식으로 ‘혁명’이나 ‘개혁’이냐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두 운동에서 모두 이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현실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 의해 생겨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혁명가들은 실제로 그다지 혁명적이지 않았고, 개혁가들도 항상 개혁적이지는 않았다. 분명, 두 운동은 정치적 궤도를 추구하게 되면서, 그 운동 방식의 차이가 점점 더 불투명해졌다. 혁명가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해야 했다. 개혁가들은 변화를 위한 가설상의 합법적인 수단이 실제로 굳게 차단되어 있고, 장벽을 뚫기 위해서는 권력 혹은 권력에 의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른바 혁명 운동은 대체로 자체의 반란 역량보다는 오히려 전쟁 중 기존의 권위가 타도되면서 권력을 장악했다. 1917년 볼셰비키(옛 소련 공산당원)가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권력은 거리에서 뒹굴고 있었다’. 운동이 일단 정권을 획득하면, 어떻게 획득했는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집권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다른 국가에서 활동하는 운동 단체들과의 결속뿐만 아니라 희생적 투쟁 정신이 필요했다. 이 운동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처음에 총에 의해서든 투표에 의해서든, 거리에서 춤을 추며 오랜 기간의 투쟁 끝에 달성한 정권 획득에 환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났다.

▶ 마지막으로, 두 운동은 두 단계 전략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단 ‘1단계 전략’이 완성되고 그들이 정권을 획득하게 되면, 추종자들은 그들이 2단계 약속인 세상을 바꾸는 것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국가 권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제한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국가는 각

기 국가간 체제의 일부에 의해 제한을 받고, 국가간 상호 관련을 갖는 체제에서는 어떤 국가도 절대적인 주권을 갖지 못한다. 오랫동안 집권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신들의 약속-운동을 수행했던 투사 간부들은 집권당의 관리가 된다-을 실현하는 것은 더욱 늦춰진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바뀌었고 필연적으로 그들 개개인의 심리상태 또한 바뀌었다. 소련에서 노멘클라투라로 알려진 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운동 조직이 장악했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듯 했다-즉, 특권계층인 고위관리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권력과 실질적인 부를 누릴 수 있었다. 일반 노동자들은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훨씬 더 힘든 일을 해야 했고,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사회주의 운동이 정권 획득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사회주의 운동의 매일의 양식이었던 투쟁적인 노동 조합 지상 운동의 전술은 ‘반혁명적’인 그리고 무척이나 실망을 주는 전술로 변하여, 보통은 탄압을 받게 된다.

1960년대 세계 상황을 분석해보면, 두 형태의 운동은 전에 비해 더 많은 공통점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두 단계의 전략 중 ‘1단계’를 완성하면 어디서나 권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공산주의 정당은 엘베강에서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3분의 1 지역을 지배했다. 민족해방운동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권력을 장악했고, 대중 운동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회 민주주의 운동과 그와 비슷한 운동은 범 유럽세계에서 서로 비슷한 토대 위에서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 1968년과 그 후

1968년 세계혁명의 주요한 특성의 기본 되는 것은 바로 이들 요인들이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혁명가들은 지역마다 다른 요구를 했지만, 대부분 어디에서나 두 가지 기본적인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었다. 우선, 미국의 패권주의와 소련이 이에 공모하는 것을 반대했다. 둘째로, 구 좌익을 해결 방안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의 일부라고 비난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실제의 권력 행사에 대하여 전통적인 반체제 운동을 지지하는 대중들이 커다란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사실 운동이 일어났던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혁의 결실이 나타났다-대개, 교육과 의료 시설이 증가했고 고용이 보장되었다. 하지만 불평등의 상태는 여전히 상당부분 남아 있었다. 불화를 야기하는 부당 노동 행위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그러한 부당 노동 행위는 1%씩 증가했다. 정부 차원에서나 직장에서 사실 민주적인 참여가 거의 없었거나, 혹은 늘어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이들 국가는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체제 내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쿠바는 혁명이 있기 전에도 설탕을 수출하는 국가였고 혁명 후,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그대로였다. 간단히 말해서, 그다지 변화가 없었다. 불만은 조금씩 변했었는지 몰라도 보통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정권을 장악하게 된 운동 조직으로부터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역사가 그들 편이니 인내해야 한다는 말만 듣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인내력은 점차 약해졌다.

세계의 주민들이 정권을 장악한 전통적인 반체제 운동을 수행한 출신들이란 결론은 부정적이었다. 그들은 이제 정당이 영광스러운



미래와 전보다 나은 일류 평등의 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믿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정당을 합법화하지 않았다. 운동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자, 변화 기구로서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 사라졌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선거에서 그와 같은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나 기대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덜 사악하다고 생각되는 쪽을 찬성하는 방어적인 투표를 했다.

### 마오쩌둥 사상에서 포르토 알레그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8년 이후, 실제로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세계로 이끌 더 나은 형태의 반체제 운동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여기에 네 가지 각각 다른 형태의 운동이 시도되었고, 이 중 몇 가지 운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첫 번째 것이 그 절정기를 맞은 다양한 마오쩌둥 주의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을 마오쩌둥 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다양하고 서로 경쟁적인 수많은 운동이 나타났는데 보통 규모는 작았지만 때때로 아주 크기도 했다. 마오쩌둥 주의자라는 말은 중국 문화 혁명에 어느 정도 고무된 사람들을 가리켰다. 본래 그들은 구 좌익이 현재 자신들이 제안하는 혁명의 순수한 교리를 전파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모두 두 가지 이유로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첫째, 그들끼리 순수한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격렬하게 투쟁했고 그리하여 곧 소규모의 고립된 분과 집단이 되고 말았다. 설령 인도에서처럼 대규모의 집단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구 좌익 운동으로 변했다. 둘째, 더욱 본질적인 이유는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사망으로 그 운동이 해체되

면서 그들을 고무했던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운동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운동은 전보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반체제 상태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녹색당과 환경주의자, 여권주의자, 미국에서의 흑인과 프랑스에서의 북아프리카 이민 2세(Beurs)와 같은 인종과 종족에 있어서 ‘소수파’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오랜 역사를 지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1970년대에 처음으로 새로워진, 보다 투쟁적인 형태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거나, 아니면 그때 다시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다. 이 운동은 또한 범 유럽 세계에서 세계 체제하의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더욱 세력을 떨쳤다. 이들 운동의 공통점은 우선 구 좌익의 두 단계 전략인 내부 계층 구조와 우선권-여성과 ‘소수파’, 환경의 필요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혁명 후에’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강력히 거부하는데 있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국가와 국가 지향적인 행동을 매우 의심스럽게 보았다.

1980년대까지 이 새로운 운동은 내부적으로 독일의 녹색당원들이 이야기한 펀디스(*fundis*)와 레알로스(*realos*)로 점차 분리되었다. 이렇게 분리된 것은 20세기 초 ‘혁명성 대 개혁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어난 탓이었다. 그 결과 펀디스는 모든 경우 패배하여 거의 사라졌다. 승리를 거둔 레알로스는 비록 생태학과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언급이 전보다 늘었으나, 과거의 다양한 전통적인 운동과 아주 다르지는 않았고, 사회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을 띠었다. 오늘날 이 운동은 특정한 국가에서 계속 중요시되고 있지만, 구 좌익-1968년 이후 구 좌익이 깨달은 교훈은 바로 생태학과 성, 성에

대한 선택권,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그들의 계획 발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반체제적인 성격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반체제 상태를 주장하는 세 번째 형태의 운동은 인권 단체들이었다. 물론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이 몇몇 운동은 1968년 이전에 존재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운동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카터 미 대통령이 중앙아메리카 문제를 다룰 때 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1975년에 동·중부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헬싱키 협정을 체결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1980년대뿐이었다. 두 가지 모두 시민 권리의 문제를 지금도 다루고 있는 수많은 단체의 설립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해줬다. 1990년대에 언론은 특히 르완다와 발칸반도 지역에서 인종청소문제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토론을 유도해냈다.

인권단체는 ‘시민 단체’란 이름 하에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시민 단체’란 용어 자체가 전략을 가리킨다: 그 정의로 본다면 시민 단체는 국가가 아니다. 그 개념은 19세기의 정권을 잡은 *le pays legal*과 “어떻게 시민 단체는 국가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시민 단체가 국가를 통제하거나 국가로 하여금 시민 단체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을 대변하는 *le pays reel*간의 구분을 나타낸다. 이 구분에 의해서 국가는 현재 작은 특권 집단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지만, 반면에 ‘시민 단체’는 주로 사회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단체는 몇몇 국가, 아마도 모든 국가가 인권 문제에 대한 쪽으로 정책을 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에 반대하기보다는 국가에 협력하는 이들처럼 보였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반체제적인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 단체는 비정부기구가 되었고 대개 중심 지역에 위치하면서 주변부에 속한 자신들의 정책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변두리 지역에서는 그들을 비판가보다는 국가의 기관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경우에는 이들 단체들은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여, 오히려 중심 지역 엘리트 투사의 권력과 직위를 이용하곤 한다.

네 번째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운동은 소위 반세계화 운동-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언론에서는 이 용어를 1999년 WTO 시애틀 회의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했다. 상품과 자본의 자유 무역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지지자들의 표현으로서 '세계화'라는 말은 1990년대에 이르러 강한 힘을 얻게 되었다. 언론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초점을 맞추었고, 워싱턴 합의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 세계무역기구(WTO)의 강화로 제도적 시행이 이루어졌다. 시애틀 WTO회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기회였지만, 뜻 있는 시위자들이 사실상 그 진행을 방해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시위자에는 구 좌익의 대규모 북미 파견단과 노동 조합, 새로운 운동 단체들과 무정부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미국노동총연맹(AFLCIO)이 아주 투쟁적인 방식으로 환경주의자들과 연합을 준비한 사실은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시애틀에 이어 신자유주의 아젠다에 의해 고무된 정부간 회의에 반대하여 전세계적으로 연이어 벌어진 시위는 다음으로 세계사회포럼을 탄생시켰는데 첫 회의는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개최되었다. 그 다음 회의는 2002년 개최되었고 1,000여 개 단체의 대표자 50만 명이상이 참석했다. 그 이후, 2003년 세계사회포럼의 준비를 위해 많은 지역 회의가 있었다.

반체제 운동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지지자들의 특성은 이전에 시도했던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무엇보다도, 세계사회포럼은 과거의 모든 형태의 운동-구 좌익, 새로운 운동, 인권 단체, 이런 범주에 쉽게 속하지 않는 이들-을 결합하려고 하고 순전히 지역적이거나 국가적, 또는 초국가적인 형태로 구성된 단체들도 포함한다. 참여의 기반은 공통적인 목적-신자유주의의 결과로서 발생한 사회의 병과 싸우는 것-과 서로의 직접적인 우선권을 함께 존중해 주는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이 하나의 틀 안에 남반구와 북반구의 운동을 결합하려는 것은 중요하다. 아직까지 유일한 슬로건은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이다. 세계사회포럼은 전반적인 상부 구조를 형성하지 않고 이러한 일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하다. 현재 다양한 운동과 지리적인 위치를 대표하는 약 50개 정도의 강력한 국제 조정위원회만이 있을 뿐이다.

구 좌익 운동은 세계사회포럼이 표면적으로 개혁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그런 불평의 소리는 아주 작았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아직 정말로 비난하지 않는다. 물론 지금까지의 성공은 이데올로기와 제도상의

관행인 신자유주의를 부정적으로 거부하는데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사회포럼이 전보다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계획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하고 있다. 앞으로 십 년간 계속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성과 서로 분리되어 독립된 (불가피하게도 계층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큰 문제이다.

## 과도기

다른 곳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현대의 세계 체제는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과도기’-분리와 혼돈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면, 반체제 운동이 지닌 문제들은 19세기와 20세기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 두 단계의 국가 지향적인 전략은 적절치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이는 장기적 혹은 즉각적인 일련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할 때 대부분의 과거 반체제 단체들의 후신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보통 시도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 추종자들로부터 회의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무관심한 반응을 얻고 있을 뿐이다.

그런 과도기에는 반체제적 전략 개념에 대한 생각을 지배하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존의 체제(자멸하게 되어 있음)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변화로 인해서 기존 체제의 최악의 특성들-계층 구조와 특권, 불평등을 반복할 새로운 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기존 구조의 과멸을 반영하는 언어를 여전히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그들

의 진영은 이른바 중도우익의 ‘전통주의자들’과 극우의 군국주의 강경론자들간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가 아닌 변화, 즉 현재의 체제만큼 나쁜 혹은 더 나쁜 새로운 체제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 주요한 특성은 체제에 있어서 과도기는 아주 불확실하다는 것인데, 이 기간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역사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에 영향을 줄 행동을 하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세계사회포럼의 기본적인 틀은 이런 딜레마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한 강조하기도 한다.

## 전략적 고찰

그러므로 과도기의 전략에는 네 가지 요소-모두가 행하기보다는 말하기가 더 쉬운 것-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첫째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토론 과정이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역사적인 반체제 운동도 이러한 토론 과정을 실패할 수 수행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분위기는 과거보다 더욱 호의적이고 지성인들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 일은 여전히 절박하고 꼭 필요한 것이어서 세계사회포럼의 구조는 이런 토론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토론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도 살펴볼 수가 있다.

두 번째 요소는 확실히 해야만 한다: 반체제 운동이라면 선거 운동을 포함한 단기적인 방어 행동을 간과할 수 없다. 세계의 보통사람들은 현재 속에 살고 있어서, 그들의 요구는 즉각적으로 다루어져

야 한다. 그것을 간과한다면 어떠한 운동도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소극적이지만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방어 행동의 동기와 정당성은 실패한 체제를 개선하기보다는, 간단히 말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다르다.

세 번째 요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 잠정적인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가장 유용한 것 중 하나-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선택적이지만 확대되고 있는 비상품화 운동을 추진하려는 시도이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조금도 사적 판매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들-신체, 물, 병원들-을 상품화하려는 신자유주의의 잇단 시도에 어쩔 수없이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반대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산업, 특히 실패한 산업들은 비상품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산업이 '국유화'-대부분의 경우, 또 다른 형태의 상품화-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목적이 수익이기 보다는 수행과 생존인, 시장에서 작동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학이나 병원의 역사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최상으로 이를 수 있는 일이다. 탈지방화의 위협을 받는 철강 공장에는 이러한 논리가 왜 불가능할까?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예를 들어서, 비교적 민주적이고 평등한 세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강조하는 내용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비교적'이란 말을 사용한다. 언제나 격차는 존재하지만, 격차가 커져 굳어버리거나 물려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은 사회주의 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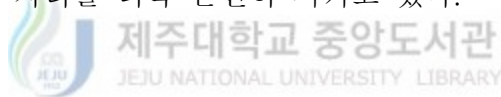


심지어 공산주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도 아닐 것이다. 또 다시 토론의 문제로 돌아가게 된다. 가장 훌륭한 사회(완벽하지는 않지만)가 어떻게 가정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 대해 논의하고 윤곽을 그리며, 실현시키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구조들을 실험해야 한다. 또한 이는 체제의 과도기에 혼돈의 세계에 대한 처음의 세 가지 계획을 실행할 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계획이 불충분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이 계획의 불충분함은 계획의 우선 사항인 토론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 Ⅲ. 베네수엘라의 붕괴

지난 5년간 베네수엘라를 뒤흔들었던 사건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최근의 어떤 정치적 대변동보다도 더 극적이었다. 1998년, 우고 차베스 전 공수부대 장교는 국가 전체의 정치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2년간 성공적으로 새로운 헌법을 추진하였으며, 절대 다수의 지지인 약 60%의 득표로 재선되었고 의회도 그의 지지자들이 지배하게 되었다. 2000년 가을까지 그가 국정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8개월 후 그의 통치를 반대하는 총파업과 대규모 거리시위에 직면하게 되었고 곧바로 군사 쿠데타로 사임하고 투옥되게 되었다. 그를 지지하는 시위와 무장군 내에서 그의 추방을 반대하는 세력의 지원 덕분에 권좌에 복귀하게 되었으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대규모이면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고용주와 노조의 연대 파업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파업은 실질적으로 전 대중매체를 동원하고, 또한 다양한 군 고위지도자들의 지원을 받는 명백하면서도 희생을 각오한 집단군사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중산층을 동원하기도 했다. 2002년 12월 2일부터 2003년 2월 2일까지 이 무자비한 힘은 베네수엘라 경제의 핵심인 석유산업을 7주 동안 마비시켜 차베스 대통령의 하야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그의 인기와 군대의 지지는 공고해졌고 파업은 국가 경제에 잔혹한 타격을 준 후 중단되었다. 하지만 야당인 프롱드 당(*fronde*)은 차베스 대통령을 하야시키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현재로는 차베스 대통령을 그 전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 자리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있다.



## 야당의 비난

이 특이한 사건들의 결과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난 2년간 왜 베네수엘라는 내전에 직면해야만 했는가?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의 선두에 선 민주연합(Democratic Coordination)은 국가에 위협이 닦쳤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인권을 유린하고 베네수엘라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전체주의 독재인 ‘카스트르의 사회주의’를 가지고 차베스는 국민들을 위협했다. 그러나 그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이미지가 세계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이런 이미지가 차베스 정권의 보편적 이미지로 통하고 있다. 아무리 야당이 반복하고 그럴듯한 비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차베스 통치하에서는 정치범과 검열이 없다. 시민들은 거의 완전한 집회의 자유를 갖고 있다. 중요한 입법에 대한 반대 시위는 대부분의 미국 시 정부에서보다도 관

대하게 다뤄졌다. 대중매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 시각마다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만약 차베스를 지지하는 볼리바르 서클(Bolivarian Circles) 멤버 몇몇이 무장한다면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이 공동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소송을 소유한 가구의 수는 서민계층에서 만큼이나 중산층에서도 많다. 시위나 대응시위 중에 발생하는 정치적 폭력은 상대적으로 작고 어떠한 측도 확실히 비난할 수 없다. 의회는 자유롭게 회의를 하고 반대 의견은 공공연히 밝히며 정당과 운동들이 활발하게 조직된다. 차베스가 더 이상 확고한 대다수의 지지자를 확보하지 못한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행정부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전체주의 광경이다.



차베스는 또한 무모한 정책으로 급격한 경제파탄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다. 1998년 집권당시의 거시경제 정책은 매우 정통적이어서 심지어는 전임 대통령의 경제부 장관을 그대로 유인시키기도 했다. 재임 후 1년 동안 원유 가격은 사상 최저였고 경제는 위축되었다. 하지만 2-3년이 지나자 원유가격은 회복되었고 경제는 2.8~3.2%의 성장을 보이며 꽤 회복되었다. 인플레이션은 2001년 12% 하락하면서 근 20년간 최저치를 보였다. 원유가격이 또 다시 하락하고 자본의 유출에 이어 회사 주도의 파업과 차베스에 대한 쿠데타 시도 등이 동시에 일어남에 따라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 되어서였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고 많은 장관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종래의 연고주의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난관에 대한 비난거리를 꼽는다면 그것은 과격한 급진주의 때문이 아니

라, 그것의 노련한 OPEC의 외교술과는 별도로 실제적인 혼란과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때문이었다. 만약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비난은 정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주로 야당의 매우 건설적이지 못한 양심의 결실인 것이다. 야당에 의한 8주간의 경제와 원유 산업에 대한 봉쇄로 베네수엘라는 6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2003년 GDP는 2002년에 기록했던 8.7%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해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 정책의 결점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도 민주 연합(Democratic Coordination)의 계획적인 태업과 비교해 보면 미미하다.

그의 정권이 전체주의의 독재 성향을 지녔고 부유했던 국가를 파산시키고 있다고 하는 차베스를 겨냥한 그럴듯한 비난들은 그 외침이 희미하지만 차베스가 불화를 일으키는 지도자여서 마찰을 빚고 독재적인 유형이 국가를 내전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했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의견에 덧붙일 내용이 더 있지만, 그것은 그것이 표현된 관용적 표현에서 번역될 필요가 있다. 차베스가 정치적 대결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 수사적 표현으로 공격적인 지도자라는 데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정치적 지도자 또는 핵심 외교관보다도 더 훌륭한 대중 연설자이며 군 운영자라는 것도 확실하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스타일에 대해 널리 퍼진 불평들은 그의 논쟁적 기질에 대한 실증보다도 더 깊은 무언가를 반영한다. 그것들이 진정 나타내는 것은 집단적 공포이다.

차베스는 상류층이나 중류층이 보기에 대통령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품위 없어 보이는 은유적 표현으로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과 얘기한다. 비록 스스로는 박식하지만 그는 교육받은 엘리트보다는 불우한 다수와 동질적인 문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베네수엘라의 두 집단간의 사회 분열은 다른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주 흔한 일처럼 인종적 차별과 함께 나타난다. 베네수엘라는 인구의 67%가 스페인계 혼혈족이고 10%는 흑인이며 23%는 소수의 백인으로 구성되었다. 차베스는 가장 하류층의 베네수엘라인처럼 피부색이 검다: 집회에서 언뜻 보아도 정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 사이의 피부색 차이를 보고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 대부분 차베스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pardos*이거나 검은 색 피부이고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인이다. 백인들이 보통 부랑자 또는 니그로를 나타낼 때 *chavistas*라고 부르는 데에는 대통령이나 그의 추종자들이 많은 베네수엘라 중산층에게 심어놓은 인종적인 적개심을 나타내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모든 편견에 의해서 야기된 이데올로기적 공포와 인종적 공포의 결합으로 극심한 불화가 생겨난다. 베네수엘라에서 영향력이 지대한 민영 언론매체는 의문을 표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식으로 자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이야기의 주제를 공격적인 대화로 이끌었다. 모든 주요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신문에서의 주제는 동일하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사회의 대부분 지역에서 차베스에 대한 폭력적인 증오를 유발시키며 이런 폭력적 증오는 점차 차베스 지지자들에게서 보복공격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1960년대 초 게릴라 운동이 절정을 이룬 이후로 실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 사이에 벌어진 틈새의 실질적인 원인은 민주연대(Democratic Coordination)가 가지고 있는 환상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구정권의 실패

차베스는 지난 20년간 라틴 아메리카의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베네수엘라를 특징지었던 더욱 깊어지는 계층간의 분열을 촉진하기 보다는 계층간 불화의 산물이었다. 만약 70년대에 치솟는 원유가격이 남미에서 1인당 국민소득을 경신하고, 국가 발전과 중산층의 소비에 자금을 공급했다해도, 생산적인 국내산업은 창출되지 못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계속 무시되었다. 원유 수입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석유수출의 전리품을 나누어 가진 Accion Democratia, 일명 민주당과 COPEI, 일명 기독교 민주당이 서로 번갈아 집권하는 정치체제 속에서 엄청난 낭비와 부패가 일상화되었다. 1978년과 1985년 사이에, GDP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자본은 유출되고 외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양당이 계속하여 신자유주의적 충격요법을 가하기 위한 두 번의 시도는 실패하여 1989년 첫 번째의 전국적인 폭동과 1996년 두 번째의 폭동은, 차베스가 권력을 쥘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었다. 90년대 중반, 1인당 GDP는 6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질 산업 (최소한의) 임금은 급락하여 80년대의 40%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제의 붕괴는 대다수의 베네수엘라인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왔고 또한 이미 심각해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임금은 급격히 떨어졌고 자금이 절실히 필요해진 국가에 의해서 사회적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빈곤층의 인구는 1984년 36%에서 1995년에는 66%로 치솟았다. 또한 극심한 빈곤층의 수도 11%에서 36%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에 도시 실업은 두 배나 증가해서 남미에서 최고수준이었다. 1981년에서 1997년 사이 전체인구 중 가장 가난한 2/5의 인구가 전 국민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1%에서 14.7%로 떨어진 반면 가장 부유한 10명의 수입은 21.8%에서 32.8%로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의 쓰라린 고통과 소수의 엄청난 부 그리고 수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양극화의 실체였던 두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중산층, 이것이 바로 구정권 하에서 사회적 양극화의 현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해결의 통합은 가능했는가?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사회의 강한 분열에 초점을 맞췄고 더욱 뚜렷하고 예민한 문제로 만들었지만 그것들을 조장하지는 않았다. 본질적으로 대통령직을 둘러싼 점차 커지는 갈등은 전면적인 계급전쟁이었다.

따라서 차베스에 대한 공격을 유발한 실질적인 원인들은 이데올로기적 구실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그것들은 정부의 사회프로그램에 나타난다. 역설적으로 차베스는 그가 집권한지 2년 동안 새로운 헌법을 통한 국가의 정치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것들은 서서히 실행되었다. 하지만 그가 일단 그런 조치를 감행하자, 2001년에 긴장은 즉시 고조되었다. 처음부터 베네수엘라 중산층은 차베스가 1999년 이후 (부분적으로는 OPEC에서의 차베스 정부의 활동 덕분에) 하류층을 원조해주는 프로젝트에 증가한 원유 수입을 사용하는 방식에 반대했다. 국가 교육비는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GNP의 3.3%에서 5.2%로 증가하였고 공공 주택과 공공 서비스도 0.8%에서 1.5%로 그리고 의료비는 1.1%에서 1.4%로 증가하였다. 중산층은 대부분 사교육과 개인 의료 서비스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감사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가장 최근에는 야당

의 원유 봉쇄 실패로 도입된 화폐 평가 절차가 빈민층에게보다 중산층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중산층은 자동차나 플로리다에서의 휴가와 같이 달러로 수입되거나 달러 표시 상품이나 용역을 빈민층보다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 원유 전쟁

이러한 불만 뒤에는 민주연합(Democratic Coordination)의 실질적인 과업 유도의 원인이 된 두 개의 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이 문제들은 과거 차베스 정권의 전환점이었던 것에서 유래되는데, 2001년 11월, 전반적인 사회 경제 정치 영역을 포함하여 입법부의 힘으로 49개의 포고령을 발표하기 위하여 곧 끝나버릴 권능법(Enabling Law)을 이용하였을 때였다. 이것들 중 하나는 2003년 1월 1일 발효되는 원유 개혁법이다. 원유 산업은 1976년 이래로 공식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다. *America Economía*지가 정한 최근 순위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베네수엘라석유회사(PDVSA)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독점기업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기업 중의 하나이다. 현재 베네수엘라석유회사가 1배럴의 원유를 추출하는데 드는 비용은 다른 주요 원유 기업 즉 엑슨 모빌이나 셸 또는 세브론 텍사코에서 드는 비용의 세 배나 된다.

베네수엘라석유회사는 한 국가 내에서 개인국가처럼 운영된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OPEC(베네수엘라는 OPEC의 창단 멤버이다)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국가적, 사회적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상당한 특권을 가진 경영진에 의해서 경영되었다. 베네수엘라석유회사의 가장 최근의 회장인 루이스 기우스티



(Luis Giusti) 자신은 회사에 의해서 활용되는 오일 탱크와 컴퓨터 서비스 회사의 부유한 소유주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회장의 통제하에서 베네수엘라석유회사는 해외 투자를 확대해왔고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 그리고 북미의 거대한 체인에 정련소를 가지고 있다) 이전 비용(transfer pricing)을 자회사에게 넘겨 베네수엘라에 주는 로열티를 1981년 총수입 1달러 당 71센트에서 2000년까지 39센트로 낮추었다. 국가 재정을 이렇게 잡아먹는데 만족하지 못한 베네수엘라석유회사의 회장들은 외국 석유회사들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고 OPEC 할당량 삭감을 시도했으며 더 많은 민영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차베스의 원유 개혁법은 외국기업의 공동회사를 50%로 제한하였고 1배럴의 원유 추출당 국가로 내는 로열티를 두 배로 늘렸다. 또한 그 법은 베네수엘라석유회사의 불투명한 경영에 회계와 재정의 투명성을 강요하였으며 적절한 과정으로 정부가 석유사업을 구조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새로운 법률의 시행을 암시하였을 때 베네수엘라석유회사 경영진은 충격을 받았고 전통적으로 부패한 언론인과 정치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풍부한 재원을 조직화하여 베네수엘라상공인협회(FEDCAMARAS)와 부패로 악명 높은 노동자연합(CTV)과 연대하여 2001년 12월10일 정부에 대한 최초의 총파업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개월 후,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석유회사의 고위 간부를 해고하였고 이것은 4월에 그에 대한 쿠데타의 원인이 되었다.

베네수엘라석유회사의 힘의 정도는 반란의 여파에서 증명되었다.

대통령직에 돌아온 차베스는 해고했던 간부를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 간부는 즉시 또다시 그에 대한 음모를 꾸미는 일에 착수하였다. 2002년 12월 차베스에 대한 대폭적인 공격으로 마지막 대결은 시작되었고 그 공격의 중심부는 석유산업에서의 동맹파업이었으며 그 중심부에는 베네수엘라석유회사의 가장 호전적인 중역인 후안 페르난데스가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사회 성격상 이 사건은 파업보다는 직장폐쇄였고 경영자와 기술자들에 의해서 컴퓨터를 정지시킴으로써 원유공급을 중단시켰다. 비록 몇몇 탱크 기술자와 도크 작업원은 참여하였지만 원유 노동자 연합인 페데페트롤(Fedepetrol) 자체는 봉쇄를 거부했다. 1월 말, 파업의 실패는 베네수엘라석유회사 고위 간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가장 당파적인 간부는 추방되었고 특히 노동자 스스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원유 생산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고 현재 회사는 전 OPEC 의장 알리 로드리게스의 지휘하에 더욱 안정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 토지권

야당을 긴장시킨 두 번째의 기본적 이슈는 토지이다. 2001년 11월의 49개의 법령들에서 두드러진 점은 주요한 농지의 개혁이었다.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이 절정기에 달한 다른 라틴 아메리카국가들에서처럼 베네수엘라에서 토지 개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때 미국은 결국 쿠바혁명이 널리 퍼지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쿠바혁명은 1960년에 최대 15만 명의 농부들에게 혜택을 준 온건적인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원유의 성공으로 관심이 급격히 떨어졌다. 근본적인 조치로는 어떤 경우에도 토지를 받은 농부에게 적정한 자금, 기술,

마케팅 원조를 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베네수엘라 농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런 이론적인 시도로부터 40년이 경과하였고 베네수엘라는 2천5백만 인구의 87%가 도시에 살고 있는, 아주 도시화된 사회가 되었다. 같은 기간에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대 50%에서 1999년에 6%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사실상 베네수엘라는 이 대륙에서 유일한 농산물 순수입국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주된 원인은 물론 원유 수익의 왜곡된 효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높은 환율을 발생시켜서 농업이든 산업이든 국내 상품을 국내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하여 노동을 비교역 서비스(non-tradeable services)로 전환시키는 낭비적인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도 원유 수입 때문이었다.

물론 이것은 농촌지역 토지의 모든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놀랍도록 불평등한 부의 구조에서 진지한 부의 재분배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못했다. 적어도 75% 이상의 개인 소유의 토지는 5%의 부호가 가지고 있는 반면에 75%의 사람들은 불과 6%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의 60%의 농부가 일용직 노동자는 아니지만 물건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경작할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

차베스가 통과시킨 *Ley de Tierras*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3가지 방법으로 지원책을 찾았다. 처음으로 농장의 최

대 법적 크기는 각각의 생산품에 따라 100에서 5000헥타르로 범위를 정했다.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토지를 없애기 위해 80%이상의 땅을 늘리는 소유에 대해서 특별세를 징수하였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토지 없는 농부들에게는 그런 대토지의 재분배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100헥타르의 질 좋은 휴경지나 5000헥타르 이상의 낮은 질의 토지는 시장 가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었다. Chavistas는 개인 소유권이 이전될 필요에 앞서 재분배될 수 있는 풍부한 정부 소유 땅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이나 18세에서 25세 사이에 모든 베네수엘라인은 토지를 신청할 수 있고, 3년 동안 경작한 후에는 자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지만 팔지는 못했다: 강한 비판이 제기된 조항은 농지를 팔아야만 하는 농부들은 암시장에서 40에서 60%의 하락된 가격으로 팔아야하는 것 때문이었다. 대토지를 작은 규모의 가족 농장으로 재분배함으로써 정부는 현재의 거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향상을 기대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적당한 크기의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성에 있어서 광대한 토지나 대농장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농산물 자급자족의 장기 계획은 2007년까지 GDP에서 농산물 비율을 두 배로 증가시켜 12%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2003년 4월 기준으로, 약 200,000헥타르(대략 500,000에이커) 토지가 4,500가족에게 분배되었다. 정부는 2003년 8월까지 가족 당 평균 10헥타르 또는 25에이커의 토지로 13만 가족 이상에게 1,500,000헥타르를 주는 프로그램을 가속화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만약 이러한 개혁이 계속되면 이런 속도는 1960년 개혁과 비교해서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토지개혁은 불확실한 일이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1945년 이후 전세계

적으로 행하여졌던 대부분의 개혁은 형평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실패하였다. 무엇보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엄청나게 컸다. 법과 의도는 이행과 성취와 전혀 다른 것이다. 오랜 기간 농촌의 발전을 무시해온 나라에서 베네수엘라의 프로그램이 성공한다고 제시할 무엇이 있겠느냐하고 비판가들이 합법적으로 묻고 있다. 그런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대답은 “다른 사람들의 좌절감은 어떻게 하겠는가?”이다. *Ley de Tierras*는 재분배를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분야에서 실행하기 위한 3개의 기관을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토지 임대를 책임지는 국립토지연구소(National Land Institute), 생산자에게 기술과 기반 산업의 도움을 책임지는 국립농촌개발연구소(National Rural Development Institute), 마케팅을 책임지는 베네수엘라농업협회(Venezuela Agricultural Corporation). 무엇보다, 차베스 정부는 과거에는 없었던 것, 즉 농업 분야에서 진정한 변화를 추진할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은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법에 대한 반응이 폭력 행위라는 데서 알 수 있다. 베네수엘라상공인협회(FEDCAMARAS)는 개인 자산의 권리에 대한 위반이라며 매우 분개했다. 그리고 차베스가 49법령을 발표한 후 몇 달 뒤 2001년 12월 최초의 고용주 주도의 직장폐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유로서 베네수엘라상공인협회는 *Ley de Tierras*를 들었다. 노동자연합(CTV)은 무역노조연맹을 위해 토지법과 관련 조치는 고용주가 사업할 능력을 침해했다는 다소 특이한 변명으로 그 파업에 동참하였다. 파업은 실패하였지만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저항은 곧 좀더 강렬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2년 8월 베네수엘라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외과의사이며 지역 위원회의 지도자인 페르도 도리아에게 복면을 한 괴한이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부른 후 도리아가 돌아보자 그에게 다섯 번이나 총을 쏘았다. 도리아가 이끄는 위원회는 정부 기록에 따르면 정부 소유인 마라카이보 호수(Lake Maracaibo) 남부 휴경지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신청한 50농가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역 대부호는 그 자산의 권리를 요구했고, 여러 번 도리아와 정부 대표가 조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 대부호는 부패로 자리에서 물러난 전 대통령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즈의 가까운 친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는 전국에 걸쳐서 제3자 명의로 광대한 60,000헥타르의 휴경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도리아는 전문적인 킬러 또는 특수부대원의 표적이 된 최초의 농민 대표는 아니다. 올해 초 죽음에서 벗어난 다른 한 사람은 호세 휴어타이다. 어깨에 총을 맞고 겨우 목숨을 건졌다. 휴어타는 그때 국립농촌개발연구소(National Rural Development Institute)에서 일하고 있었고 도리아의 위원회에 나온 요구를 진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약 십여 개의 농민 단체 연합의 회장인 브라울리오 알바레즈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50명 이상의 저명한 지도자가 암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들 중 어느 것도 대토지 소유자와 경찰사이의 결탁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다. 도리아와 휴어타의 사건을 예로 들면 총잡이를 고용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 대토지 소유자는 전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즈의 정부 시절 농업장관이었고 줄리아주의 전 주지사의 형이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계급전쟁의 가장 주목할만한 일들은 도시에서 벌어진다면 죽느냐 사느냐하는 전선은

지금까지는 시골지역이다.

## 빈민가 토지권

반면 매우 다른 유형의 토지개혁법은 의제를 상정했는데 차베스 정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인의 거의 90%는 도시에 살고 있다. 물론 60%는 슬럼가에 살고 있고 그들은 무단 침입과 싸움으로 차지한 땅에 판자나 약한 벽돌로 넘어질 듯한 집을 짓고 있다. 많은 빈곤층 사람들은 카라카스 주위의 언덕 중턱과 같은 위험한 빈민가에 살고 있는데 그 곳은 많은 비가 올 때마다 아래 계곡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안전하지 못한 지대에 살고 있다. 이전의 정부는 불결하고 빈곤한 빈민가를 헐고 거주민들을 다른 지역의 공공 주택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항상 주장했다. 하지만 매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실행되지 않았다. 반면 구정권의 빈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태도는 잔혹했다. 빈민층이 카를로스 안트레스 페페즈에 의해 시행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사나운 폭동을 일으켜 언덕 중턱에서 내려 올 때인 1989년 2월27일에 있었던 그 유명한 Caracazo에서 경찰과 군은 전국적으로 3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빈민층을 학살하였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은 빈민가에서 전개된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 (asamblea de barrios)으로 알려진 운동이 베네수엘라 빈민층의 거주지를 합법화하는 것을 베네수엘라 빈민층의 핵심 요구로 만들었다. 결국 이 모임은 차베스의 볼리바르 운동과 합하여져 1998년 후반 차베스를 당선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차베스가 당선된 후에 그는 다른 문제들에 관심을 쏟았다.

의제는 야당 중 하나인 프리메로 저스티카(Pimero Justicia)에 의해 2000년에 의회에서 다루어졌는데 그 정당은 민주 사회당(AD)과 기독교 민주당(COPEI)의 양두정치의 불명예로 공식인 채로 남아있는 자리를 물려받기를 원하는 부유한 도시외곽의 야망 있는 전문가들로 최근에 구성된 정당이었다. ‘밑에서부터의 신자유주의’ 이론가인 페루작가 헤르도 드 쏘토(Herndo de Soto)의 “다른 길과 자본의 신비(The Other Path and The Mytery of Capital)”에서의 이론을 영리하게 적용하여 그 정당은 국가가 토지주이거나 또는 빈민이 10년 토지를 점유하면 토지 소유권을 빈민가 주민들에게 이전하는 법률 초안을 제출하였다. 이 초안은 개인 자산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토지권 침해에 대하여 최고 5년의 투옥형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차베스는 그가 카를로스 안드레즈 페레즈의 전복을 시도 하였던 10주년 기념일인 2002년 2월 4일에 등장하여 대통령으로서 첫 단계에서 열렬한 사회 이슈를 거의 잊어버릴 뻔했다고 한 후에 그의 정부는 빈민층의 주거지를 빈민층에게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하였다. 그의 연설의 시기는 2001년 12월 최초의 총파업과 다가올 2002년 4월 쿠데타 사이에 있었다. 또한 그의 연설은 언론의 신랄한 비판과 반대 공격 하에서 정부는 잃어버렸던 지지층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지난해까지 약 7000가정이 혜택을 받았으며 2003년 말까지는 약 5,000,000구역의 토지가 이전될 예정이다.

## 빈민가

하지만 법령으로 오직 공공소유의 토지만 이전할 수 있었다. 도시



지역 임대 규약을 위한 국가 기술청장인 이반 마르티네즈는 빈민가의 대략 3분의 1 가량은 국가 소유이고 3분의 1은 개인소유, 나머지 3분의 1은 결정되지 못했거나 분쟁 중이라고 평가했다. 개인 소유의 땅을 빈민지역 거주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의회 통과가 필요하다. 차베스의 제5공화국운동(Fifth Republic Movement)으로부터 제안된 도시빈민 정착에 대한 토지 임대 규약 특별법은 이 법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공동체와 폭넓은 협의 후 통과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토지 위원회’가 모든 빈민층 거주지역에 만들어지고 대표자를 의회로 보내 의원들과 함께 법을 논의할 것이다. 마르티네즈에 따르면 그들은 공공의 자산 형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원래의 초안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제안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역사상 최초로 실제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진 최초의 법이다. 일단 실행되면 이것은 공교육을 제외한 어떤 다른 정부 프로그램보다 베네수엘라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비록 마르티네즈가 이 법은 10년 동안 추진되어야 완성된다고 평가했지만 인구의 40%나 되는 베네수엘라인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마르티네즈가 표현한 대로 소유권 이전의 논리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국민에게 진 사회적 채무에 대한 인식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는 국민을 위해 100만 가구를 건설했고 민간 부분은 약 200만 가구를 지었다. 반면에 빈민가에서는 확실히 앞의 두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재원으로 300만이 넘는 가구가 지어졌다. 생각해 보면, 빈민가를 헐고 다른 지역에 집을 짓는 것은 10배의 비용이 든다. 이것은 마르티네즈의 말처럼 ‘빈민가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다’라는 것이 명백하다.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되었으며 가장 정치적

인 빈민가 라 베가 영토의 창시자인 안드레스 안틸라노는 새로운 법의 초안에 대하여 마르티네즈와 함께 일하여 왔다. 그는 빈민층이 ‘법적 권리와 상당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집단적 주체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다른 말로 드 쏘토(De Soto)와 프리메르 저스티카(Primer Justicia)는 도시 토지 개혁을 빈민층에게 자본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본질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차베스 지지자들은 그것을 민주주의의 참여와 공동체내에서의 자활로 간직하고 있다.

법령과 제안된 법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토지 위원회는 어떤 공동체에서 최소 절반 이상의 가구가 모이거나 최대 200가구가 모여서 뽑힌 7명에서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그들이 대표하는 지역의 정리된 토지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그들의 행위는 차베스가 2001년 만든 볼리바르 서클과 유사하게 보였다. 그들의 문헌에 따르면 이 단체는 빠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들 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고 문제가 적절한 정부기관으로 이첩되도록 한다. 반면 언론과 야당은 그들을 전체주의 정권의 선동 집단이라고 비난하였지만, 대부분 그들은 규정된 대로 모든 일을 정확히 했다. 이를테면 문화 행사를 하고 씨몬 볼리바르(Simon Bolivar)의 그림 벽화를 그리며 헌법을 논의할 워크숍을 계획하고 지역사회 센터를 지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빈민가 변화의 추진 세력이다.

그러나 서클과 토지 위원회의 차이점은 전자는 차베스 정권과 국가의 부활을 위해서 스스로 참여한 최고 12명의 당파적 그룹이다. 반면 토지 위원회는 최고 200가구의 공동체의 대표로 민주주의적으

로 선출되었거나 어떠한 정치적 연고도 없다. 2002년 여름까지 그것은 150,000명을 대표하는 300개 이상의 위원회가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주로 3개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도시 자산 권리의 규칙, 빈민가의 자치정부 그리고 주변지역 스스로의 변혁 등이다. 하지만 더욱 최근에 그들은 도시 지역법의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자산권리의 조정에서, 위원회는 각 가정이 가지는 토지의 규모를 측정하고 가정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관료는 그들과 일을 함께 하면서 빈민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장비의 사용법을 훈련시켰다. 빈민가의 집 모양은 일정치 않아서 이 과정은 힘들었다. 등록 과정은 또한 공동체의 휴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 소유의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일단 토지가 지정되자 일반적으로 건물 재료 또는 공공요금 통지서의 영수증의 형식으로 각각의 가족은 특정 토지에 대해 그들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국가 기술청은 일단 자산을 양도할 준비를 하였고 만약 3개월 내 누구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실제의 자산 증서로 교환하였다. 그러나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위험하지 않는 안전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증서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그들의 토지 대신에 다른 지역의 정부 주택에 대한 권리를 교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또한 2002년 2월 법령 이후에 일어난 토지권 침해는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대신 정부 공공 주택 프로그램에 호소해야 한다. 자치정부의 목표가 유효한 한, 토지 위원회는 현재의 행정

구역보다 더욱 더 통제하기가 수월하다. 왜냐하면 후자는 각각 카사 카스에서 50만 명 이상의 시민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물과 전기, 쓰레기 처리 또는 도로와 같은 공공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시청과 공기업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 위원회들은 문화활동, 보안, 지역미화와 같은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한 분과 위원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스스로의 변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방향에서 토지 위원회는 그들의 역사를 밝히고, 구역을 규정하고 지역의 규칙을 제정하고 이것의 가치를 설명하는 빈민가를 위한 헌장의 초안을 만드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이 헌장은 빈민가 공동체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강한 집합적인 통합의 의식만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끌 것이고 현재의 상태는 목적을 향한 변화의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드 소토(de soto)가 묘사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그들의 집의 매매를 허가하고 소규모 사업의 대출과 소기업을 활성화시킨다면 빈민가에서 효과가 있기를 정부도 내심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진정 원하는 것은 빈민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식’이다. 토지 분과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라는 말한다. ‘우리는 권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좀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를 믿는다.’ 그는 덧붙여서 ‘사람들은 묻는다. 정부가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냐고?’

## **볼리바르의 민영화?**

역설적으로, 차베스 정부의 도시와 농촌 지역의 토지 개혁은 실제

로 민영화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 재분배되어진 많은 토지들이 공공 소유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의 사회적 의미는 거대한 국가 소유의 자원이나 물, 전기, 전화와 같은 공공재를 다국적 기업에 팔도록 촉진하고 권유하는 세계은행이나 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유명무실하고 비능률적인 국가의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토지에서 실제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인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도시와 농촌 토지의 개혁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들 지역은 서로 연관지어질 것이 명백하다. 지역 전문가인 마이클 맥더드는 “만약 당신이 도시에서는 토지 개혁을 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성공한 스토리는 너무 많은 이주민들로 인해 빛이 바래게 될 것이라면서 개혁은 광범위하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은 광대한 영역과 복잡성 그리고 만만찮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거대한 토지에 대하여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막강한 대토지 소유자, 농촌 지도자를 암살하는 특수부대원들, 정부관리를 부패시키는 마약거래업자, 참을성 없는 유권자 자신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킨다면 장기적으로 차베스 정부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야당은 그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베스가 번복할 수 없는 개혁법을 시행하기 전에 그를 추방시키고자 하고 있다. 연이은 봉쇄와 쿠데타 시도의 실패 후,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서명이 충분히 확보되면 새로운 헌법 조항 하에 8월에 시행될 소환투표에 기대고

있었다. 민주연대(Democratic Coordination)는 충분한 서명을 얻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해야시키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많다.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야당은 처음에 차베스를 지지했던 유권자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로는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향후 3~4개월 안에 여론의 물결을 바꾸기 위해서 국가를 궁지에 몰아넣는 심각한 불황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이미 차베스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막판 힘 겨루기는 시작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향후 몇 년 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정치적 균형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서

- 안정효. 「영어 길들이기(번역편)」. 서울: 현암사, 1997.
- 이근달. 「영문 번역의 노하우」. 서울: 시사영어사, 1998.
- 최정화. 「최정화 교수의 통역 번역 노하우」. 서울: 넥서스, 2001.

### 2. 번역서

- Koller, Werner 저 · 박용삼 역: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 마쓰모토 야스히로 마쓰모토 아이린 저 · 김정우 역: 「영어번역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90가지 핵심 포인트」. 서울: 창문사, 1997.

### 3. 국외서

- Katan, David. *Translating Culture*. Manchester: ST.Jerome Publishing, 1999.
- Robinson, Douglas. *Becoming a Translator*. New York: Routledge, 1997.
- Schaffner, Christina. *Translation and Quality*.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Ltd, 1998.